

Vol.104

2024
SPRING

열린 충남

권두언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이 행복한 도정을 바라며.....

특집

국가 탄소중립의 실현,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특별도의 성공에 달려 있다
베이밸리 구상의 맥락과 구성을 되짚어본다
충남 농업·농촌의 진단과 핵심과제

현안연구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충남청년들의 삶의 모습과 정책연계
빈집 제도개선 및 충남형 빈집정비사업 추진방안

#권두언

- 04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이 행복한 도정을 바라며.....**
김익영 | 백석문화대학교 교수(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장)

#특집

- 07 **국가 탄소중립의 실현,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특별도의 성공에 달려 있다.**
이홍택 |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베이밸리 구상의 맥락과 구성을 되짚어본다**
홍원표 |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 충남 농업·농촌의 진단과 핵심과제**
김창길 |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장(충남농업농원회 민간위원장)

#현안연구

- 27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충남청년들의 삶의 모습과 정책연계**
박춘섭 |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빈집 제도개선 및 충남형 빈집정비사업 추진방안**
최정현·임준홍·제수진 | 충남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원

#열린마당

- 42 **충청남도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이다현 | 네트워크 RE 시민학습센터 운영위원

#언론이 바라본 충남

- 49 **내 고향의 인구소멸을 생각한다**
김재근 | 대전일보 선임기자

#로컬이 답이다

- 52 **공주 제민천의 중심에 (주)퍼즐랩이 있다**
권오상 | (주)퍼즐랩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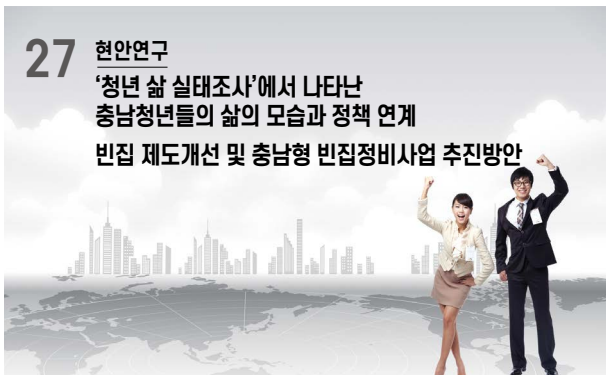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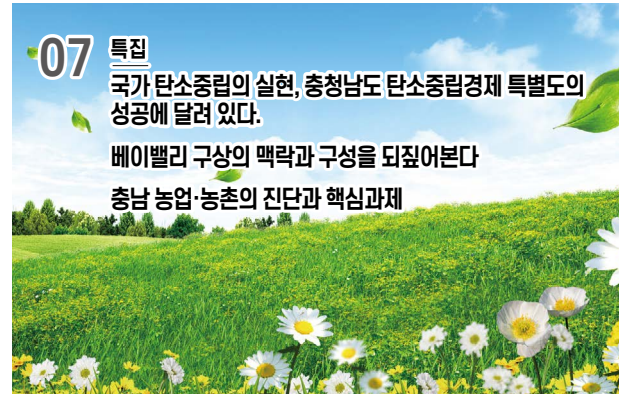
#연구원 소식

- 59 **충남연구원, 힘센 충남 위한 정책연구 강화**
충남연구원-선문대-한서대, 충남 스마트 클린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 체결
중부권 대기질 개선 방안 머리 맞대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 내포 이전 개소식 가져

스마트폰으로도
[열린충남]을
만나보세요



2024 SPRING Vol.104



발행일 2024년 3월 발행인 유동훈 발행처 충남연구원 편집위원장 오용준 편집위원 백운성, 김양중, 김영일, 오혜정, 유학열, 이흥택, 김진수 에디터 정봉희, 김선영
주소 우)32589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금홍동) 전화 041.840.1114 팩스 041.840.1129 홈페이지 www.cni.re.kr 편집제작 천안인쇄주식회사
문의사항은 goforit@cni.re.kr로 연락바랍니다.

김의영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이 행복한 도정을 바라며.....



어떻게 하면 충남에서 마음 편하고, 따뜻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충남인이라면 누구나 그려보는 청사진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정을 이끌고 있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도 공무원 및 관계자들에게 몇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한다. 도정은 213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역동적인 경제 성장과 지역 주도 균형 발전, 도민의 삶의 질 제공 그리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현을 목표로 해야 한다.

힘센 충남은 도정 현안 과제를 강력한 추진력으로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신념과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역사의 주역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 전략을 제시했다.



김의영 |

백석문화대학교 교수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장)

특히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함께하는 따뜻한 우리, 가치 있고 품격 있는 삶과 우리 뜻이 통하는 충남도정을 5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1) 미래전략산업 육성, 2) 국가탄소 중립경제 선도, 3) 혁신적 교통, 물류 인프라 구축, 4) 든든한 시장 지원, 5) 지역 특색을 살린 균형 발전, 6) 지역과 상생하는 인재 육성, 7) 농업의 스마트 미래 성장 산업화, 8) 해양 관광, 신산업 육성, 9) 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 조성, 10) 늘 곁에 있는 사회복지망 구축, 11) 균등한 보육 환경 조성, 12) 사각지대 없는 지역 의료체계 구축, 13) 도민 안심 안전 체계 구축, 14)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관광 진흥, 15) 품격 있는 문화예술 기반 조성, 16) 건강한 체육활동 지원, 17) 자연생태 회복력 복원, 18) 참여와 소통의 열린 도정과 자율, 19) 책임의 혁신 도정, 20)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방정부 구현 등 20대 기본전략을 표방했다.

충남에 살고 싶고, 충남에 머무르고, 충남을 향한 마음의 손짓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역동적 경제 성장과 도민의 품격 있는 삶의 질 보장 및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완성이 필요하다. 도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실행 방안, 국토 균형발전 방안과 지방시대 정책 실천 방안 등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실행이 요구된다.

둘째, 추진 중점 과제로는 AI 기반 미래차 산업 허브 육성,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포와 동시에 이에 따른 실행, KTX 천안아산역 광역 복합 환승센터 설치 및 천안역까지 GTX-C노선 유치, 지방은행 설립, 충남에 방송사 유치,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글로벌 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 기업-대학 간 상생 발전 협력체계 구축, 국방 산단 추진, 미래농업 육성, 해양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이 그것이다.

셋째,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충남의 미래일자리 창출, 청년정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함으로써 실천하는 책임도정을 펼쳐야 한다.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해결 방안, 청년 농이 열정만 있다면 창업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인생 2막 진입을 앞두고 노인 인구에 대한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라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 충남을 살리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충남의 미래 100년은 충남을 6개축으로 디지털 수도의 천안, 아산, 행정중심 복합도시 내포신도시, 글로벌 해양관광 레저 서해안권, 역사와 전통이 어우러진 현대의 문화관광 도시 백제권, 국방산업도시 내륙권, 농촌의 혁신적인 변화 등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러한 것을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

다섯째,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도민의 정책 수요 충족을 위한 지역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민 삶의 질 개선에 전력을 다하는 도민 중심의 도정 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충청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정의 역할과 기능이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 도민의 이야기를 잘 듣고 살피는 행정으로 도민에게 신뢰받고, 청렴을 실천해 '힘센충남'의 슬로건에 걸맞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등을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도민들을 위하여 힘차게 성장하는 충남,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충남, 안전하고 따뜻한 충남, 품격 있는 문화가 있는 충남, 어디서나 살기 좋은 충남을 꼭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특 집



국가 탄소중립의 실현,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특별도의 성공에 달려 있다
베이밸리 구상의 맥락과 구성을 되짚어본다
충남 농업·농촌의 진단과 핵심과제

국가 탄소중립의 실현,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특별도의 성공에 달려 있다

이홍택 |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개요

지난 2022년 10월 충청남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를 선포했다. 이는 중앙정부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광역자치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만 국가 탄소중립 실현이 가능하다는 위기의식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충청남도는 중장기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가 노정되어 있으며, 주력산업인 제철,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대표적인 고탄소 배출 산업들은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창출하기 위한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질서가 변화¹⁾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산업계에서는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에 김태흠 도지사는 탄소중립에 대한 '능동적(proactive) 대응'을 통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경제체제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는 충남형 탄소중립경제의 핵심 철학으로 4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1) EU는 2026년 탄소국경세를 도입하여 철강 등 고탄소 제품에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우리나라 관련 기업은 연간 5300억원의 추가 부담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자국산업 보호를 비롯해 기후대응 산업 육성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계획임. 또한 애플, 삼성 등 다수의 글로벌 대기업들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글로벌 공급망 참여기업의 기후대응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블랙록, 노르웨이 국부펀드 등 세계적 투자기관들도 기후대응을 하지 않는 기업들에게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상황

첫째, 현재의 발전량을 유지·확대하는 방향에서 청정에너지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 미래에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이 산업 및 지역경쟁력의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RE100 캠페인이나 전기요금 차등제 등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로 인해 발전량이 절반 이하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LNG 대체개발, 수소·암모니아 혼소, 수소터빈,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선제적·단계적 탄소중립 정책기반 조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해야 한다. 탄소중립을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가지 않고 미루면 미래에는 기업들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공공기관의 적극적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산해야 한다. 현재 충남도 및 15개 시군은 탈플라스틱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선도적 역할을 통해 도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중앙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 실천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국가의 대응과 지원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석탄발전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등의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철학을 토대로 2023년 7월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추진전략」이 수립되었으며, 공공,기업, 시민사회 등의 상생협력을 통해 5대 분야 72개 실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 탄소중립의 최전선, 충청남도

충남도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지역이다. 2020년 기준 충남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 4,191톤($\text{tonCO}_2\text{-eq}$)으로 전라남도 9,319톤($\text{tonCO}_2\text{-eq}$), 경기도 6,289톤($\text{tonCO}_2\text{-eq}$), 경북도 5,069톤($\text{tonCO}_2\text{-eq}$)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사업장 1개당 온실가스 배출량(203,312톤($\text{tonCO}_2\text{-eq}$)), 인구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144톤($\text{tonCO}_2\text{-eq}$))에 있어서도 충남도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62%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제철, 석유화학 등 산업부문의 배출도 30%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충남에 입지해 있는 까닭이다(경남 14기, 강원 7기, 인천 6기, 전남 2기).

전국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입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 충남의 발전량은 2021년 기준 전국 발전량의 19%(111,228,524MWh)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소비량은 전체 생산량 대비 43.9%(48,801,626MWh)에 불과하며, 생산전력의 56.1%는 수도권 등 외부지역으로 송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력의 송전을 위해 수많은 송전탑이 건설되어 있으나 지중화율은 전국 최저(1.4%)인 상황으로 지역주민들은 지속적인 환경적, 재산적, 신체적 피해를 받아오고 있다.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 따르면 도내 석탄화력발전소는 2032년까지 14기가 폐지될 계획이며, 보령 1~2호기는 2020년 선제적인 폐쇄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2032년 이후에도 당진 5~10기의 폐쇄가 전망되고 있다. 산업부(2021)의 외부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14기의 폐쇄가 이루어질 경우 충남도의 생산유발감소 19.2조원, 부가가치유발감소 7.8조원, 취업유발감소인원 7,577명의 지역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보령 1·2호기의 폐쇄 후 보령시의 인구는 100,229명('20.12)에서 97,268명('22.10)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근로자 감소(96명)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수익(44억원)과 소비지출(190억원)도 감소한 상황이다.

[표 1] 석탄화력발전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영향 분석

지역	생산유발감소(십억원)	부가가치 유발감소(십억원)	취업유발감소인원(명)
충청남도(14기)	19,208	7,830	7,577
경상남도(12기)	17,564	7,518	7,896
인천광역시(2기)	2,832	1,140	1,543
전라남도(2기)	2,331	1,076	631
합계	41,936	17,564	17,647

출처 : 산업부·key to way,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폐지 석탄발전소 활용방안 연구', 2021.

충남도의 산업구조 또한 체질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0년 산업부문의 충남 에너지 소비량은 전국 2위 수준으로 석유 64.7%, 석탄 21.5%의 사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충남도의 산업용 전력사용량은 2015년 37,015,954MWh에서 41,260,896MWh로 증가하였으며, 2019년 기준 전체 전력사용량에서 78.4%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도내 산업체는 57.5%가 고탄소 배출업종에 해당된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13.7%),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11.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9.4%) 등의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특별도의 성공을 위한 정책 과제

탄소중립을 둘러싼 세계적 변화의 흐름에서 고탄소 배출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충청남도는 한국 탄소중립 실현의 최전선일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탄소중립의 실천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충청남도는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선포’(‘22.10) 이후 각고의 노력 끝에 여러 성과를 이루어 냈다.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선도, 탄소중립경제 분야 국비 2300억원 유치, 세계 최초 60%급 수소혼소 터빈 실증,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기업 지원 조례 제정,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 등 탄소중립경제 특별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성과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의 에너지 전환 및 산업구조의 저탄소화 등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도내 공공기관, 대·중소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이에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는 ‘탄소중립경제로 기회와 활력이 넘치는 힘센 충남 실현’을 비전으로 다음과 같은 5대 분야 10대 정책과제 72개 세부실천사업을 계획하였으며, 도내 주체들과의 적극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① 저탄소 新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경제’ : 글로벌 수소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한 수소패권 선점 및 기술혁신 생태계 구축과 고탄소산업의 저탄소 대전환을 통한 미래원천 확보
- ②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환경제’ : 탈석탄 전환체계 구축을 통한 석탄발전 청정전환 실현과 저탄소 인프라의 선제적 보급을 통한 저탄소 생활기반 확산
- ③ 산업구조 저탄소화를 위한 ‘순환경제’ : CCUS, 블루카본 등 충남형 탄소순환 생태계의 조성 및 농어촌 지역의 자원순환을 위한 농어촌 그린투게더 확산
- ④ 도민 탄소중립 확산을 위한 ‘생활경제’ : 탄소중립경제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한 플래그십 조성 및 그린창업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⑤ 탄소중립 국가허브 : 탄소중립경제 이니셔티브 선도를 위한 이슈발굴·선점과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글로벌 위상 강화

비전	탄소중립경제로 기회와 활력이 넘치는 힘센 충남 실현			
전략타겟	미래시장 선점	기술실증 선도	도민체감 확산	글로벌 리더십 강화
목표	① 경제적 파급효과 101.5조원 ② 일자리 창출 60.2만명 ③ 국비유치 9.1조원			
추진전략	미래경제	① 수소 패권·기술혁신 ② 미래 원전	글로벌 수소 혁신생태계 구축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대전환	
	전환경제	③ 석탄발전 청정전환 ④ 저탄소 생활기반	탈석탄 전환체계 구축 저탄소 인프라 선제적 보급	
	순환경제	⑤ 탄소순환 ⑥ 자원순환	충남형 탄소순환 생태계 조성 농어촌 그린투게더	
	생활경제	⑦ 녹색도시 ⑧ 녹색일자리	탄소중립경제 플래그십(Flagship) 조성 그린창업 및 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	
	탄소중립 국가허브	⑨ 이슈선도 ⑩ 글로벌 리더십	탄소중립경제 이니셔티브 선도 탄소중립경제 글로벌 위상 강화	

[그림 1]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특별도의 비전 및 전략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특별도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의 저탄소화, 도민의 생활속 탄소중립경제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청정에너지 전환과 고탄소 배출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국가 및 충청남도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며 나아가 새로운 친환경 산업 분야에 투자와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들의 실천이 중요하다.

첫째,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지원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14기가 2036년까지 폐지될 계획이다. 14기가 폐지될 경우 충남도의 생산유발감소 19.2조원, 부가가치유발감소 7.8조원, 취업유발감소인원 7,577명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침체와 인구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탈석탄에 따른 지역침체를 예방하기 위해 5개 대상지역에 58조원의 재정을 지원하여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비롯한 신산업 육성, 공공기관 설립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만큼, 한국의 경우도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국가적 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지원수단으로 최소 10조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친환경 신산업 육성, 지역개발사업 등의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청정에너지 전환이 단계적·전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도내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로 인해 지역경제의 침체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에너지 생산량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 차원에서 단계적·전략적 에너지 전환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대응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기술개발(수소·암모니아 혼소) 지원을 강화해 나가며,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글로벌 해상풍력 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소터빈 시험연구센터 구축 등 친환경 에너지 개발의 실증 지역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또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및 해고 등의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교육 및 고용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탄소순환형 산업단지 조성을 단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유럽의 탄소국경세 도입과 국내외 글로벌 기업의 RE100 가입 확산에 따라 탄소배출을 절감할 수 있고 RE100을 실현할 수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탄소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며 탄소포집과 에너지의 생태적 순환이 이루어지는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산업단지(산업단지 4.0모델)의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중소기업의 고탄소산업 전환지원이 필요하다. 도내 중소기업들의 57.6%가 고탄소 배출 업종에 해당하는 만큼,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저탄소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조사업장에 다수 보급된 고탄소 공정·설비의 저탄소 전환에 필수적인 분야에 대하여 산·학·연 지원을 통한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가능한 핵심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대상 에너지 효율향상 설비 전환을 위한 자금 지원 대책도 마련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서해안 해양·환경·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하다. 충남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서해안 해양·환경·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 충남도 석탄화력발전의 친환경 전환과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해양·환경·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한 관련 공공기관의 집적이 매우 필요하다. 수소산업의 육성과 탄소순환(CCUS) 등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갯벌에서 나오는 블루카본 등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해양 관련 공공기관, 해양쓰레기나 축사 분뇨 등과 같은 환경 분야의 공공기관 등의 이전이 필요하다.

베이밸리 구상의 맥락과 구성을 되짚어본다

홍원표 |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2022년 8월 충남도지사와 경기도 지사의 상생협력 협약을 기점으로 베이밸리 구상이 공식화되었다. 그 후 2023년 3월 충남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의 공동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베이밸리 구상 연구용역이 시작되어 2023년 12월 최종보고회 그리고 2024년 2월 초광역 베이밸리 상생협력 보고회를 끝으로 연구용역은 마무리되었다. 한편 1년에 걸친 연구를 바탕으로 충남도는 2024년 2월 베이밸리 충남 비전 선포식을 했다.

베이밸리 구상이 연구단계를 넘어 사업화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선 지금 베이밸리 구상 연구를 되돌아보고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할 때다.

이 글에서는 베이밸리 구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그 이면에 흐르는 논리적 맥락은 무엇인지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베이밸리 구상이 제기된 사회적 맥락을 살펴보고, 그 비전과 목표 설정을 소개한 후 10대 프로젝트, 20대 핵심사업을 근간으로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마지막에서는 연구에서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겠다.

베이밸리 구상의 사회적 맥락

베이밸리 구상을 단순히 말하자면 ‘아산만권¹⁾을 실리콘밸리처럼 만들자’라는 것이다. 이러한 구상이 제기된 사회적 배경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맥락이 있다고 생각한다.

1) 이 글에서 아산만권은 충남의 천안, 아산, 당진, 서산 그리고 경기의 안성, 평택, 화성, 안산, 시흥 등 9개 시군을 가리키며, 이 글에서 ‘베이밸리’는 이 아산만권과 동일한 지역을 지칭한다.

먼저, 글로벌 대전환이다. 4차산업혁명, 탄소중립, 미·중 신냉전 등 거대한 전환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다. 미국 등지에서 인공지능을 핵심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이 시작되어 기술혁신을 거듭하면서 생산 현장 혁신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미 글로벌 대량생산 제조업 집적지로서 성장한 아산만권은 4차산업혁명이 기술혁신에서 플랫폼 혁신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 현장 혁신을 받아들여 생산력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아산만권의 위상은 명확하다. 아산만권은 최종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배출에서 전국 최고 수준²⁾으로, 탄소중립이 가장 시급한 지역이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의 전략적 에너지원으로 부상한 수소에너지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평택·당진항을 갖추고 있어서 LNG비축기지를 활용하여 블루수소를 생산할 수 있고 외국에서 생산된 그린수소를 수입하여 공급할 수 있는 집산지 역할을 할 수 있다. 한편 아산만권은 중국에 인접한 지리적 입지뿐 아니라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재의 공급기지로서 성장을 거듭했는데, 최근 미·중신냉전은 이러한 성장방식이 더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심어주고 있다.

둘째, 성장을 저하다. 2011~2020년 기간 우리나라 연평균성장률은 3.8%를 기록하고 있다. 아산만권은 6%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최근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 아산만권은 우리나라 GRDP의 11%를 차지하고 수출의 21.3%를 차지하는 등 대체 불가능한 산업 요충지다. 특히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산업의 수출 비중은 42.4%, 자동차는 18.3%에 달하는 등 미래산업의 기반 또한 탄탄하다. 이러한 점에서 “아산만권을 잃으면 우리나라를 잃는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제조강국 코리아’의 정체성이 강하게 구현된 곳이 바로 아산만권이다.

셋째, 직주 분리 현상이다. 아산만권은 급속한 공업화에 비해 정주환경이 뒤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는 당진, 서산 등 충남뿐 아니라 평택, 화성 등 경기도 지역이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아산만권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려면 그에 필요한 인재가 모여야 하는데 직주분리현상이 이러한 인재들의 지역산업과의 긴밀한 응집력 형성을 제약하고 있다. 아산만권의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하지 않으면 아산만권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견인차로 나서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베이밸리 구상은 제기되었다. 베이밸리 구상이 제기된 때부터 이러한 인식이 명확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아니었으나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런 인식은 더 또렷해지고 광범하게 공유되었다.

2) 2020년 기준 베이밸리의 최종에너지소비 비중은 19.4%로 전국 시도 2위인 충남의 15.7% 보다 높으며,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18.5%로 전국 1위인 충남의 21.8%와 전국 3위인 경기도의 14.3%의 중간이다.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비전과 목표

베이밸리 구상이 복합적인 고려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지만, 그 시작과 끝은 산업에 있다. 아산만권이 성장한 근본 원인이 이곳이 살기 좋은 정주 환경을 가졌다고 보다는 여기에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30년 후 아산만권이 국가경제에 어떠한 위상을 가질지 상상해보면 제조업 중심지라는 정체성은 계속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산업을 중심으로 베이밸리의 미래를 그리는 것이 현실적이다.

아산만권이 우리나라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가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의 심장, 베이밸리”를 비전으로 정했다. 다시 뛰는 것은 재도약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아산만권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이끌어왔음을 확인하고 미래에도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³⁾ “심장”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에서 꽤 적절한 비유라고 볼 수 있다. 아산만권이 동물의 신체에 비유하자면 두뇌나 머리는 아닐 것이다. 물론 두뇌나 머리를 지향할 수 있으나 이는 그리 현실적이지 않다. 심장이 인체의 구석구석에 피를 공급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베이밸리는 단순히 해당 지역의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나아가 동아시아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지향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목표 설정에는 그동안 우여곡절이 있었다. 2023년 3월 착수보고회나 6월 중간보고회에서는 전체 내용을 “산업, 인재, 정주, 인프라”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산업을 중심으로 인재, 정주,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틀에 동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중간보고회 이후에 전반적으로 논리구조가 맞맞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새로운 시각에서 다양한 검토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글로벌 차원에서의 대응, 국가 차원에서의 의의, 지역 차원에서의 의미 등을 구분하여 더욱 입체적인 접근을 검토하여 그 결과 그림과 같이 3대 목표로 정리되었다.

3) 2024년 2월 베이밸리 충남 비전선포식에서는 “대한민국 경제산업수도, 베이밸리”가 비전으로 제시되었지만, 베이밸리가 우리나라 산업의 재도약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에는 기초는 변함이 없다.



[그림 1] 베이밸리 구상의 비전과 목표체계

출처 : 충청남도 균형발전국,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자료’, 2023.12. 22.

즉, 신성장동력창출, 글로벌 네트워크의 가교 역할 수행, 메가리전의 중심지로 육성 등 3가지 목표가 제시되었다. 이는 각각 국가, 글로벌, 지역 차원의 문제에 대한 대응 관계가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것, 글로벌 차원에서는 중화권과 비중화권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담당할 것, 지역 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할 것 등이다.

이러한 틀에 대해 문제 제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구도는 4차산업혁명, 탄소중립, 미·중신냉전 등 글로벌 트렌드 중 미·중신냉전을 중심에 둔 구도하는 점이다. 이러한 구도는 “기술 패권”, “경제 안보” 등 사람들에게 친숙한 흐름이기는 하나, 4차산업혁명, 탄소중립과 비교해 가장 가변적이고 영향력이 작아서 이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전략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가장 컸다. 다양한 검토 끝에 이러한 틀을 유지하면서 하위 10대 프로젝트에 3차산업혁명, 탄소중립 관련 내용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

2024년 2월 베이밸리 충남 비전선포식을 계기로 이 문제는 다시 논의되었다.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존 목표 체계가 너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술적이고 현학적인 내용을 일반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목표를 산업, 인재, 정주환경, SOC로 구분하고 별도로 목표를 문장화하지 않고 산업의 내용을 제시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인재, 정주환경, SOC를 수단으로 제시하는 구도를 택했다.

결국 비전체계와 목표에 대한 탐색은 애초 산업, 인재, 정주,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하는 원래의 방향으로 돌아왔으나 그 내용은 한층 풍부하고 치밀해졌다. 정·반·합의 변증법이 작용한 셈이다.

10대 프로젝트 20대 핵심 사업

베이밸리 구상의 핵심은 10대 프로젝트 20대 핵심사업에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신성장동력 창출' 목표에 4개 프로젝트, '글로벌 네트워크의 가교 역할 수행' 목표에 3개 프로젝트, '메가리전의 중심지로 육성' 목표에 3개 프로젝트가 배치되었다. 기본적으로 '신성장 동력 창출'에는 산업과 연구개발 분야, '글로벌 네트워크의 가교 역할 수행'에는 외국 투자·인재 분야와 초국경교통 분야, '메가리전의 중심지로 육성'에는 교통망, 관광, 정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산업 분야에서 탄소중립 산업벨트 구축과 핵심광물 비축기지 및 재자원화 등을 포함하는 베이밸리 메가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수소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탄소중립 클러스터, 시스템반도체, 전기차, 메디컬 바이오와 신소재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신성장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자·산·학·연 R&D 혁신역량 강화, 기업 지역인재채용목표제, 스타트업 육성 등 청년창업생태계 조성 등이 제시되었다. 이 중 기업 지역인재채용목표제는 아산만권 소재 기업이 지역 대학 졸업자를 일정 비율이상 채용할 경우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도적으로 도전적인 과제이나 그 의미가 크기 때문에 20대 핵심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글로벌 네트워크의 가교 목표에는 외국인직접투자 기반조성, 글로벌 우수인력 유치기반 구축, 한황해 직교류 교통망 구축 등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외국인직접투자 기반 조성을 위해서 충남경제자유구역 개발, 외국인투자지역 확대, 베이밸리 개발청 단계적 추진 등 사업이 제시되었다. 특히, 충남경제자유구역은 과거와 달리 제조업 일변도를 탈피하여 R&D, 서비스 등 활동을 대거 수용하고 지리적으로도 해안지역에서 내륙지역으로도 지구를 지정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었다. 또한, 글로벌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이민관리청 충남 유치, 한국형 STEM비자 신설,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 설립, 아산만 글로벌 공동캠퍼스 조성 등이 제시되었다.

환황해직교류 교통망에는 충남과 산동성을 잇는 초고속교통망 구상. 서산공항의 중부권 특화항공거점 조성, 글로벌 복합항만 조성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서산공항을 항공물류거점으로 조성하고 이와 연계하여 소형항공기 MRO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서산공항을 단순히 지역의 국내항공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머무르지 않고 국제물류항공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배이밸리를 메가리전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은 아산만권을 어느곳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경쟁력있는 정주 지역으로 조성하고자하는 차원에서 아산만권의 대표 정주지역 (K-SPACE) 개발,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스마트타운 건설 등을 포함하고 전국과의 교통접근성을 향상하고 아산만권을 단일 통근권 형성을 위한 순환철도, 순환고속도로 그리고 휴식 기능 향상을 위한 해양 마arina, 해양환경 정화, 산재특화 병원 건립 등을 담고 있다. K-SPACE는 아산시 인주역 일대를 제2의 '천안·아산역'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다. 이를 공간적으로 살펴보면, 충남의 발전축을 경부축에서 서해안으로 확장하는 공간구상이다. 지난 2012년 도청을 내포로 이전한 이래 꾸준히 추진해 온 “해양 충남”의 가치를 공간적으로 보다 구체화하는 큰 걸음이다.

10대 프로젝트 20개 핵심사업을 50개의 사업조서로 구체화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경기도와의 상생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월22일 충남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초광역 배이밸리 사업구상 보고회’에서는 12개 상생협력 사업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에 충남도와 경기도의 배이밸리 공동비전 선포식을 할 예정이다.

구분	10대 프로젝트	20개 핵심사업	공동/단독
1 신성장동력 창출	1-1 배이밸리 메가클러스터(BMC) 조성	1-1-1 배이밸리 탄소중립 산업벨트 구축 1-1-2 Economic Security Sector 조성	공동 단독
	1-2 미래신성장산업 육성	1-2-1 반도체·미래모빌리티 산업육성 1-2-2 바이오·신소재 산업육성	공동 공동
	1-3 지·산·학·연 R&D혁신생태계 구축	1-3-1 지·산·학·연 R&D혁신 역량강화	단독
	1-4 대한민국 청년일자리 전진기지 조성	1-4-1 기업 지역인재채용목표제 운영 1-4-2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	공동 공동
	2-1 지속가능한 외국인직접투자기반 조성	2-1-1 충남 경제자유구역 개발 2-1-2 배이밸리 개발청 설립	단독 공동
	2-2 글로벌 우수인력유치기반구축	2-2-1 한국형 STEM 비자 신설 2-2-2 한국형 국제교육도시 조성 2-2-3 한·중 초국경 고속교통구상	공동 공동 단독
2 글로벌 네트워킹의 거점역할수행	2-3 환황해 직교류교통망 구축	2-3-1 중부권 특화항공거점 조성(서산공항) 2-3-2 글로벌 복합항만 조성	단독 단독
	3-1 배이밸리 K-SPACE 조성	3-1-1 K-SPACE 개발	공동
	3-2 배이밸리 초광역교통망 구축	3-2-1 배이밸리 순환고속도로 건설 3-2-2 배이밸리 순환철도 건설	공동 공동
3 메가리전의 중심지로 육성	3-3 메가시티 지원 인프라 확충	3-3-1 K-골드코스트 3-3-2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 3-3-3 배이밸리 생활지원 인프라 확충	공동 공동 공동

[그림 2] 배이밸리 구상의 10대 프로젝트 20개 핵심사업

출처 : 충청남도 균형발전국, ‘배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자료’, 2023.12. 22.

베이밸리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과제

베이밸리 기본 구상 연구는 마무리되었고 이제부터는 사업화 단계에 접어든다. 올해 상반기로 예정된 충남도지사와 경기도지사의 베이밸리 공동비전 선포식은 그 서막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베이밸리 구상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서 다음 세 가지가 관건이 되라고 생각된다.

첫째, 구동존이(求同存異) 접근이 필요하다. 베이밸리는 충남과 경기의 일부분이고 우리나라의 일부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지역이다. 차이점을 부각하여 상호 경쟁이나 견제를 자아내기보다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합의하고 우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추진체계를 단계적으로 갖추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베이밸리 구상은 장기적 계획으로 설계되었다. 도지사나 시장, 군수 등 지방정부 수장들의 임기를 뛰어넘는 있는 사업들이 많다. 따라서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지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일정을 당기거나 뛰어넘거나 하는 방식으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는 지난 2008~2014년 기간 황해경제자유구청이 충남도와 경기도의 협력으로 의욕적으로 추진되었음에도 성과를 내지 못한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

셋째, 베이밸리 구상의 저변 확대를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구상을 마련하는 과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사업화를 해나가야 하는데, 무엇보다 도민과 국민들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관의 행위였다면, 이제부터는 민관이 함께 가야 한다.

여담이지만, ‘베이밸리(Bay Valley)’라는 용어가 대중들에게는 너무 생소하고 단어 자체도 기괴한 조합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차라리 ‘아산만권’이라는 용어로 쉽게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베이밸리’라는 단어를 실리콘밸리처럼 고유명사화 하자는 의견이 강해졌다. 세계인이 베이밸리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한민국 아산만권이 생각나도록 말이다. 그럴 자신감을 가져도 좋다.

충남 농업 · 농촌의 진단과 핵심과제

김창길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장,
(충남생농위원회 민간위원장)

충남 농업 · 농촌의 진단

충남은 국토의 중앙에 위치해 교통 및 물류 네트워크에 우수한 접근성을 갖고 있으며, 수도권과 가까이 있어 어느지역 보다 역동적이다. 이같은 여건에서 민선 8기의 충남도정의 비전을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으로 설정하고 도출된 과제를 강력한 추진력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

충남농업은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해 벼를 비롯한 과일·채소 등의 농산물, 한육우·돼지 등의 가축과 함께 가공식품 등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 개발, 농산물 유통 및 수출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충남 농림어업부문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의 12.8%를 차지하고, 농림축산국 예산은 충남도 전체 예산의 12%이다.

2024년 충남도의 예산은 10조 8,109억원이며 이 가운데 농림축산국의 예산은 1조 2,204억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11.3%이다. 2022년말 충남의 농가인구는 24만 2천명으로 도전체 인구의 11.4%, 전국 농가인구의 11.2%를 차지한다. 농가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은 55%로 전국의 농가고령화를 49.8%보다 높아 전국 2위이다. 40세 미만의 청년농 비율은 10.5%로 전국 9개도 가운데 8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최하위인 경북이 10.4%). 농가소득은 4,549만원으로 전국 평균 농가소득 보다 낮고, 이 가운데 농업소득은 992만원으로 농가소득의 21.8%이며, 전국 평균 농업소득보다 약간 높다. 경지면적은 21만 5천ha로 전체 경제면적의 14.1%, 벼 재배면적은 전국의 18.6%로 9개도 가운데 2위를 차지한다. 시설온실은 7,780ha로 전국 면적의 14.2%이다. 축산부문에서 한육우는 45만 7천두로 전국 한우의 12.3%로 2위, 돼지는 234만 2천두로 전국의 20.5%로 1위이다.

[표 1] 충남 농업·농촌의 진단을 위한 주요 지표

지표명	지표치	도 순위	기준 사점	비고
농림어업 지역내 총생산(GRDP)	4조 5,382억원	3위	'22.12	전국 농림어업GRDP의 12.8%
농림축산국 예산	1조 1,929억원	-	'24.01	충남도 전체예산의 12.0%
농가인구	242천명	5위	'22.12	전국 농가인구의 11.2% 충남도 인구의 11.4%
농가 고령인구비율	55.0%	2위	'23.04	전국농가 고령인구비율 49.8%
40세미만농가인구비율	10.5%	8위	'23.04	전국농가 40세미만 비율 13.1%
농가소득	4,549만원	6위	'23.05	전국 농가소득 4,615만원
경지면적	215천ha	3위	'22.12	전국(1,528천ha)의 14.1%
벼 재배면적	132천ha	2위	'23.12	전국 708천ha의 18.6%
쌀 생산량	728천톤	2위	'23.12	전국 370만톤
시설온실	7,780ha	3위	'22.12	전국 54,806ha의 14.2%
한(육)우	457천두	4위	'23.09	전국 한육우의 12.3%
돼지	2,342천두	1위	'23.09	전국 돼지의 20.5%

출처 : 충청남도, 통계청.

충남도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 위험지역이다.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현황(2021년 10월 지정)에 따르면 전국 인구소멸 위험지역 89곳 가운데 충남은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등 9개 지역이 포함됐다. 특히 15개 시·군 중 5개 지역(태안·청양·부여·서천·금산)이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이다. 인구소멸과 청년인구 감소가 농촌지역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부각 되고 있다.

충남의 주요 농업·농촌 정책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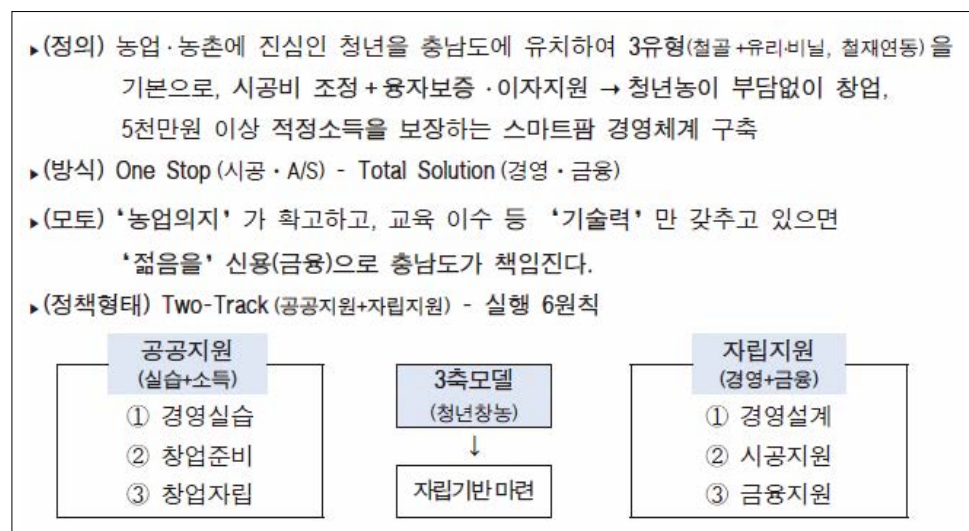
농업·농촌은 우리 삶의 뿌리이자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안식처를 제공하며 경제발전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왔으나, 최근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중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 민선 8기의 김태홍 도지사는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살고 싶은 농촌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남의 농업정책은 5천만원 이상의 농가소득 달성을 목표로 돈 되는 농업으로 구조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청년농 유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농업·농촌의 구조 개혁을 위한 주요정책으로 ①미래농업의 주역인 청년농 육성, ②돈되는 농업을 위한 스마트팜 확대, ③고령 은퇴농의 경영이양 촉진,

④농업인 기준 재정립, ⑤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 ⑥충남형 ICT 융복합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조성 등 여섯 가지 역점 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청년농 육성, 스마트팜 확대, 농촌소멸 위기 대응 등 세 가지 정책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청년이 유입하는 농업으로 전환을 위해 청년농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래농업의 주역인 청년농 육성을 위해 관심→준비→유입→ 정착 단계별 청년농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2026년까지 연 소득 5천만원 이상의 전문 청년농 3천명 육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청년농의 경우 농업의지가 확고하고, 교육 이수 등을 통한 기술력만 갖추고 있으면 창농할 수 있도록 원스톱, 토털솔루션의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하고 있다. 지원정책은 두가지 트랙으로 공공지원과 자립지원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먼저 공공지원은 기술과 자금이 부족하고 토지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을 대상으로 경영실습, 창업준비, 창업자립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립지원은 농업인 자립유도와 부담 완화를 위해 경영설계, 시공지원, 금융지원을 통해 스마트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충남도는 2026년까지 서산 B지구 23만평에 3,300억 원을 투자해 청년들이 배우고 일하고 살수있는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원예생산·유통·가공·체험, 정주기능까지 망라한 농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네덜란드 정부와 협력하여 '청년농 인큐베이팅 교육·연구센터'를 설립해 젊은 농업인재들을 양성하는 계획도 담고 있다.

[그림 1] 충남형 청년농의 스마트팜 추진방식



출처 : 충청남도 스마트농업과. '청년이 묻고 충남이 답하다', 2024.

둘째, 미래농업을 견인할 스마트농업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농업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충남의 스마트농업은 청년농 육성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해 논산 스마트농업 복합단지조성, 부여 스마트팜 콤플렉스 지원센터조성, 탄소중립형 그린스마트팜 조성, ICT융복합 스마트축산단지조성 등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충남형 스마트팜 운영의 추진체계는 도·시군·기술원 지원, 거버넌스 지원, 소비·유통관리지원, 스마트팜 현장지원 등 크게 네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군 및 기술원의 담당자로 구성된 스마트농업육성 TF팀은 행정과 지도를 담당한다. 거버넌스 지원은 경영설계 지원단, 시공금융 지원단, 충남스마트온실시공협동조합 등으로 이루어진다. 소비·유통관리 지원은 대형소비주체 유통지원단, 원스톱 수출지원단, 전후방 산업모델과 R&D 등이다. 스마트팜 현장지원은 (사)충남스마트농업협회, 작물별 도제형 실증지원단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스마트 축산부문에서는 보령·서천 부사간척지, 당진 석문간척지에 양돈 30만 두씩 키울 수 있는 충남형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표 2] 충남의 주요 스마트농업 추진사업

사업명	주요 내용	사업비
논산 스마트농업 복합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특화 작목 중심의 스마트농업 교육 및 실증의 다기능복합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딸기 증식포, 농업기계 스마트농업 교육장, 주요원예작물(딸기, 토마토, 아열대 과수 등) 실증 단지 	127억원 (2021~2025)
부여 스마트팜 콤플렉스 지원센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농업 분야 생산, 교육, 연구기능이 집약된 첨단지원센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형 첨단온실, 육종연구실, 빅데이터센터 등 교육체험시설 등 	160억원 (2021~2025)
탄소중립형 그린 스마트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중부발전 탄소중립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보령 지역상생스마트팜, 신서천 에코스마트팜 - 탄소중립센터, 재배시설(토마토, 딸기, 옆채류, 약초) 등 	240억원
ICT 융복합 스마트축산 단지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돼지 생산·도축·육가공 전과정 원스톱,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스마트축산단지 시범모델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문간척지(당진), 부사간척지(보령·서천) 	2023~2026

출처 : 충청남도 스마트농업과, '청년이 묻고 충남이 답하다', 2024.

셋째,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다움 회복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주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촌공간정비,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 거점조성, 청년농촌보금자리 등 40개 지구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기반으로 축사·공장 등 유해시설을 철거·이전하여 정비한 부지를 마을 주민들을 위한 쉼터·생활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촌중심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테마를 살려 지역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발전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농촌중심지 기능을 보완하면서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들의 유입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또한 충남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와 보험가입을 지원해주고 있다. 뿐만아니라 노후 체험휴양시설 리모델링 지원과 고향마실 한마당을 개최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의 돌봄 강화를 위해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금년 3월말부터 시행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도시계획처럼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별로 구획화하여 농촌공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 농업 · 농촌의 핵심과제

농업농촌이 직면한 인구소멸과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는 한국농업은 물론이고 충남농업에 닥친 엄연한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는 농업경영 규모의 확대와 농업경영자의 세대교체를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위한 핵심과제가 청년농의 육성과 디지털농업(스마트농업)의 대전환이며 충남은 작년 7월 '충남 스마트농업 육성'을 선포하고 농업·농촌의 디지털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년농 3,000명 육성의 목표는 농업경영주와 연계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 충남의 40세 미만의 농업경영주(2022년 기준)는 764가구로 전체 경영주농가의 0.7%에 불과한 실정이다. 육성된 청년농이 농업경영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면 수년 내에 젊은 농업경영주 가구가 크게 늘어 지역별 농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충남의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읍·면은 25개 읍, 136개 면에 4,474개의 리가 있다. 좀 더 여력이 되다면 충남의 리단위별 미래농업을 이끌 약 4,000명 정도의 중장기 청년농 육성목표를 설정해 추진하면 농업인력의 세대교체와 미래농업 성장동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디지털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스마트농업은 미래농업이 가야만 하는 방향으로 상당한 관심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스마트농업은 시설원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노지농업에서 스마트농업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스마트농업이 주로 생산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육종·채종·육묘부터 생육·수확·유통·소비 등 농업 밸류체인 기반의 스마트농업과 전후방산업이 연계된 스마트농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데이터 구축과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농촌뉴빌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인구감소 시대에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관계인구(특정지역에 관심을 갖고 관계를 유지하는 외지인)와 생활인구(특정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의 저변 확대를 위해 치유농업과 산림치유, 해양치유, 치유관광 등의 치유산업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도시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매칭한 플랫폼의 활성화, 농촌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확대,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투자유치를 위해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 획기적인 패키지 지원구역)를 충남농촌 지역 여건에 맞도록 운영, 유희시설을 활용한 워케이션(Worcation, 휴식을 취하며 원격으로 업무를 보는 근무형태) 공간으로 활용 등 발상의 전환을 통한 혁신적인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혁신 프로그램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책담당자, 전문가, 농업인, 지역주민,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협업하여 현장에서 적절한 해법을 모색하는 리빙랩(Living Lab) 방식을 도입 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남 농업·농촌의 혁신을 위한 발상의 전환을 위해서는 남들과 다르게 보고(think different),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think another),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think positive)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충남이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농업 확산, 농촌소멸 위기 대응 등의 핵심과제를 로드맵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잘 추진한다면 농업은 성장산업으로 농촌은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삶터·일터·쉼터로 재탄생하게 되며 국내 농업·농촌 해법 모색을 위한 롤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충남청년들의 삶의 모습과 정책연계¹⁾

박춘섭 |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청년 삶 실태조사란 무엇인가?

청년 삶 실태조사는 2020년 제정·시행된 「청년기본법」에 의거하여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2022년도 조사는 그 첫 번째 조사에 해당된다. 조사의 목적은 청년층 삶의 실태와 특성, 욕구 및 인식을 파악하여, 청년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기초자료로서 활용하는 데 있다. 조사의 대상은 전국의 만19~34세 청년을 포함하는 가구, 즉 전국 17개 시·도 일반가구 내의 만19~34세 가구원과 그 가구원이다.

금번('22년)조사에서는 전국 1만5천 가구를 목표로 실시. 최종 14,966가구, 14,966명의 청년이 응답하였다. 조사기관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통계진흥원에 의뢰·추진하였다. 조사기간은 '22년 7월 18일부터 8월 26일로, 면접조사로 진행하였다. 조사항목은 일반사항, 주거, 건강, 교육훈련, 노동, 관계 및 참여, 사회인식 및 미래설계, 경제 8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이 글은 '22년도 조사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충남청년들의 삶을 조명하고, 관련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충남청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1) 주거

■ (부모동거) 부모동거 청년비율은 48.2%(전국 57.5%),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
비동거 비율이 높아진다.

1) 이 글은 충남연구원 현안과제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도 청년정책 연계방안(2023)'을 발췌 및 정리한 것임

■ (독립계획·시기) 65.0%의 충남청년은 구체적 계획 없었다(전국 67.7%). 주된 이유는 경제적 여건 부족(44.2%)에 있지만, 통학·통근 등 거리·공간적 영향(40.3%)도 강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었다. 독립시기는 취업 후(37.3%)로 가장 높았고, 결혼 후(13.5%)로 낮았는데, 이는 전국평균 취업 후(27.2%), 결혼 후(23.1%)와 비교할 때, 충남청년들은 특히 지리적·경제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독립시기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구분	비율	독립을 계획하지 않는 주된 이유					
		통학·통근 가까움	경제적 여건 부족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존재	자녀 양육 하는데 부모도움 필요	기타	특별한 이유 없음
전체	100	21.0	56.6	1.2	0.4	0.8	20.0
수도권	100	18.3	59.7	1.2	0.3	0.8	19.6
비수도권	100	24.5	52.5	1.3	0.5	0.8	20.5
충남	100	40.3	44.2	3.6	0.0	1.1	10.8

구분	비율	부모로부터 주거 독립에 대해 적절한 시기						
		만 19세	취업이후	어느 정도 자산형성 후	결혼이후	출산이후	특별한 이유 없음	굳이 필요없다고 생각
전체	100	3.5	27.2	27.8	23.1	0.1	16.7	1.6
수도권	100	3.1	24.6	29.0	25.1	0.2	16.8	1.4
비수도권	100	4.1	30.1	26.3	20.9	0.1	16.6	1.9
충남	100	3.9	37.3	26.5	13.5	0.0	16.9	2.0

출처 : 국무조정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2023.

■ (거주의향) 충남청년의 66.4%가 계속 거주의지를 나타냈으나, 이와 같은 수치는 전국평균(73.1%) 및 수도권(75.1%), 비수도권 (70.8%)과 비교하여 낮았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려는 이유는 더 나은 일자리 기회(28.6%), 더 나은 문화기회(23.0%), 더 나은 주거환경(20.7%)였다. 이는 충남이 일자리 기회의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지만, 주거(교육·여가 등)환경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필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구분	비율	현재 거주 지역에서의 타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은 이유							
		주거비 부담 줄이기 위해	통학통근 어려움 해소	더 나은 교육보육 의료환경	더 나은 일자리 기회	더 나은 문화기회	더 나은 주거환경	가족 친척 사는 지역	기타
전체	100	4.3	12.0	11.5	29.6	20.5	18.1	2.6	1.3
수도권	100	7.7	19.3	12.2	13.1	17.6	25.9	2.5	1.7
비수도권	100	1.0	5.0	10.9	45.4	23.3	10.6	2.7	1.0
충남	100	0.4	6.3	15.4	28.6	23.0	20.7	2.6	3.0

출처 : 국무조정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2023.

2) 노동과 교육훈련

- (실직 사유) 최근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 '학업을 계속하려고'(14.3%),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13.8%) 순으로, '근무조건 또는 작업환경이 나빠서'(8.3%, 전국15.0%),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5.5%, 전국 12.9%)라는 후순위이었다²⁾ 이와 같은 결과는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 필요성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 (구직활동하지 않는 이유) 충남청년들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37.2%(전국 22.0%)로 매우 높고, '취업준비' 30.5% (전국47.1%)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전국적으로 볼 때 30~34세의 여성의 경우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무려 응답 비율 33.0%로 나타나 청년들의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 (대학 미진학자 교육훈련 선호분야) 전국적으로 볼 때, 특정 직종의 직업훈련 선호 비율 (36.3%)이 높지만, 교육훈련 받고 싶지 않다는 의견(36.9%)도 존재하여 양가적인 측면이 있었다. 물론 충남청년들 역시 이러한 경향성이 존재하지만, '특정직종과 관련된 직업훈련'(46.2%, 전국 36.3%)로 높은 선호를 나타내었다.

구분	비율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싶은 영역					
		특정직종과 관련된 직업훈련	창업교육	어학	교양	기타	받고 싶지 않음
전체	100	36.3	16.6	7.4	2.0	0.8	36.9
수도권	100	36.2	18.1	8.5	1.8	0.5	35.0
비수도권	100	36.4	15.0	6.2	2.2	1.2	39.0
충남	100	46.2	11.4	7.1	1.4	4.3	29.5

출처 : 국무조정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2023.

2) 기타 19.5%를 제외하였음

- (번아웃 경험) 충남청년들의 35.7%(전국 33.9%)가 최근 1년동안 번아웃 경험이 있었고, 이유로는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37.8%), 일의 과중(22.2%), 일에 대한 회의(12.5%)순이었다.

3. 관계·참여

- (문화예술활동) 충남청년들의 35.0%(전국 40.4%)만이 정기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활동하지 못하는 이유로 시간이 부족해서(43.5%), 필요 없어서(20.4%), 경제적 부담(16.2%)을 들었다.
- (스포츠 활동) 정기적 스포츠활동의 경험 43.8%(전국 46.2%)으로 문화활동보다는 높지만, 시간이 부족해서(50.9%), 경제적 부담(17.9%), 필요 없어서(13.8%),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7.7%) 등의 이유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사회인식·미래설계

- (삶 인식) 삶에 대한 만족도는 6.88점, 행복감 7.01점, 자유로운 선택 7.03점, 사회에 대한 신뢰 4.87점(전국 5.20점)으로 나타나, 청년개인적 삶의 만족은 높지만, 사회에 대한 신뢰가 낮았다.³⁾
- (결혼과 출산) 충남청년들은 결혼계획 59.3%, 출산의향 65.3%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볼 때, 결혼계획 61.8%(남자 68.7%, 여자 54.2%), 출산의향 63.3%(남 70.5%, 여 55.3%)으로, 남녀간 차이가 존재하였다.

5. 경제

- (생활비) 충남청년가구의 총 생활비 월평균 274만원(전국 303만원), 중위는 250만원(전국 280만원)이었다. 지출항목은 식료품비, 연금·사회보험료, 교통비 순이었다.
- (소득) 가구소득 평균은 6,010만원(전국 6,525만원), 개인소득은 2,029만원(전국 2,162만원)으로, 전체적으로 약간 낮은 편이었다.
- (부채) 충남청년의 평균 부채금액은 3,903만원(전국 4,454만원), 청년개인은 808만원(전국 1,172만원)이었다. 이중 주택관련 부채가 2,98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비 부채가 210만원(평균 119만원)으로 많았다. 반면 자산투자 부채는 96만원(평균 130만원) 적었다.

2) 점수는 10점 만점 기준임

우리는 충남청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청년 삶 실태조사와 함께, 연구는 여러 청년·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충남청년들의 현재와 삶의 필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분야	주요 내용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청년이 더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지역 내 원하는 일자리 부족하여 관외에서 취업하는 경제적·지리적 요인 존재 많은 추가적 일, 적정수당 부족, 일 스트레스에 따른 번아웃 경험 등이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리며, 특히 여성 일자리의 질이 낮아 육아·학업 등의 이유로 쉽게 퇴직하게 하는 경향 존재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문화·예술 등 놀거리, 괜찮은 주거 등이 미흡하기 때문이며, 또한 공적주거에 대한 경험미흡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접근성이 높지 않아, 학업을 통한 역량강화 및 취미·여가활동에 제약이 존재
1인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사회적 조건 및 정주여건 면에서 취약한 청년 1인가구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



1인가구 청년



자영업 청년



정책전문가

[그림 1] 청년 · 전문가 인터뷰



위의 시사점을 기반으로, 연구는 2023년 현재 추진 중인 충청남도 청년정책사업을 재조합·설계하여 3대 사업방향 및 사업(프로젝트)을 제안한다.

사업방향	주요 프로젝트
인프라형 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충남청년 기숙사 '충남청년 생활 빌리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청년독립을 위한 정주여건 필요(지리·경제적 문제), 지속정주를 위한 주거 문화환경 중요성, 청년 1인가구의 삶의 어려움 극복필요 - 추진방향: 1인 가구를 위한 다기능 공공형 기숙사 운영하며, 모델별로 기능 차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도농모델: 공동식사+창업·문화공간+워케이션+청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몇 개 시군을 묶는 권역거점형추진으로 최소 인원 확보 ※ 대상자: 귀농귀촌 및 공익활동가 사회적경제 정착지원, 스마트팜 사관학교생 선발자 등 ※ 연계사업: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청양군 청년창업지원공간 조성 예산·태안 청년 창업지원, 공익활동가·사회적경제 정착지원, 청년센터구축 ② 도시모델: 공동식사+창업·창직 공간+심리상담+청년센터 → 교통 편리한 도심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대학생·취준생·산업단지 취업자 등 ※ 연계사업: 충남형 1인가구 지원사업,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청년센터 구축 등 - 생활중심 빌리지(1인가구 공공형 기숙사) → 충남형 리브투게더(청년부부·가족)로 연계추진
연계협력형 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충남청년 통합교육과정 '충남청년 생활학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세분화된 교육 수요 대응, 취미·문화교육의 접근성 미흡. 공공기관의 역할제고 - 추진방향: 기존 교육과정 확대 및 주체간 연계를 통해 통합교육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입문campus: 미진학 청년 등 대상으로 창업·창농 등 도 중점과제 연계 교육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기관: 도교육청, 충남문화관광재단, 농업기술원 ※ 연계사업: 인턴십 머물랩 공익활동 지원,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구축 등 ② 창활campus: 특정 콘텐츠 활용한 교육심화 및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기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문화관광재단 ※ 연계사업: 충남 글로벌게임 센터 운영,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충남 음악창작소 운영, 청년문화콘텐츠센터 건립 등 ③ 특활campus: 특정직종 연계직업 훈련고도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기관: 남서울대학 등 충남내 대학 ※ 연계사업: ICT 이노베이션 충남 스퀘어 운영, SW 미래채움, SW 중심대학 지원 등 - 교육과정 개설 등 online campus기반 학교운영 및 매니저 등 플랫폼 운영 (청년센터 등) - 창활campus 및 특활campus 프로그램은 천안·아산에서 충남전역으로 확대 실시추진

4) 인프라형이란, 인프라를 중심으로 기존사업을 묶어서 추진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삶의 문제(불편함)를 해소시키는 방식의 사업연계

5) 연계협력형 연계협력형이란, 일부지역에 편중된 사업을 충남도내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청년대상을 넓히는 것을 물론 혜택이 골고루 확산되는 균형발전 추구

사업방향	주요 프로젝트
제도형 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 충남청년 지원제도 ‘충남청년 생활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육아의 어려움으로 여성청년 경력단절 일자리의 질 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들의 충남에 대한 신뢰가 낮아 지역이탈이 지속되는 악순환 - 추진방향: 육아·일자리·정주분야의 제도도입을 통한 기업 및 근로자 등에게 실질적 혜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충남형 청년친화기업제도 도입·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도 발주사업에 대한 가점제도 운영 ※ 사례확산을 통한 관내기업 참여 독려 ※ 임금(수당포함), 근로시간, 복지혜택, 갈등중재기관 존재 등 지표도입 ② 아바휴직지원금(장려금) 조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등 남성근로자에게 지원추진 ③ 충남토박이 지원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사업시 ‘토박이’에 대한 가점부여 ※ 대학진학 또는 미진학 ‘토박이’에게 갭이어 프로그램 우선지원 ※ 연계사업: 충남형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6) 제도형 제도형이란, 청년의 삶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 특히 일자리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문제해결 및 기업문화 향상. 이를 통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충남 추구

빈집 제도개선 및 충남형 빈집정비사업 추진방안

최정현 · 임준홍 · 제수진 | 충남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인구 dead-cross 현상이 시작된 이후 자연감소가 시작되었고, 지방 인구의 수도권 집중,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유출 등으로 인해 지방 도시와, 원도심에서 빈집 증가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특히 농촌은 매년 전국 약 7,500호 정도의 빈집을 정비하고 있으나, 신규 빈집발생량이 이를 상회하여 농촌 빈집은 66,000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충청남도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000호 이상 빈집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철거 중심의 빈집정비사업은 한계가 있다. 농촌뿐 아니라 도시내 빈집을 포함하여 빈집정비사업 추진의 지속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사업방식을 발굴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빈집 예방과 정비를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철거 외 다양한 정비방식을 추진할 수 있는 충남형 빈집정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의 빈집정책 및 정비사업 추진사례

1) 일본 빈집정책 및 추진사례

일본은 2014년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였다. 빈집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생활환경 악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빈집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했다. 특정빈집으로 지정된 빈집은 고정자산세 증가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였고, 철거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소유자 대신 빈집을 철거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법령에는 ‘빈집은행’ 제도를 도입하여 빈집 소유자와 이용희망자를 연결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교토시에서는 ‘별장·빈집세’ 조례안을 통해 교토 내 빈집 15,000채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시의회 승인을 통과하였고 2026년부터 부과 예정이다.

히메지시 이에시마는 빈집을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에이시마 NPO법인과 함께 2013년 설립한 이에시마 컨시어지¹⁾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도요타 자동차 기업에서 지원하는 후원금과 함께 이에시마 컨시어지의 출자, 이에시마 관광협회의 출자 등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빈집은 해안선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으나, 게스트하우스의 특성상 해안선에 연접하여 있거나 경관이 좋은 지역에 위치한 빈집이 주로 활용되고 있는 한계가 있다.



[그림 1] 이에시마 게스트하우스 내부 1



[그림 2] 이에시마 게스트하우스 내부 1

오노미치시는 빈집은행을 적극활용한 대표적 사례이다. 2007년 오노미치시 내 존재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명 가량의 주민이 함께한 ‘오노미치빈집재생프로젝트 NPO’를 설립하여 빈집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빈집은행을 통해 170건 정도 빈집과 이주자를 매칭시켰다. 게스트하우스, 임시거주 주택, 카페, 공방, 커뮤니티 시설 등을 조성하였으며, 운영은 NPO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지역 주민이 NPO를 조직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빈집을 활용하였으나, 입지여건이 좋지 않은 빈집은 활용방안이 없는 한계가 있다.



[그림 3] 오노미치 시내 상점가 내 게스트하우스 외부



[그림 4] 빈집은행을 통해 이주한 이주자들 운영 중인 카페

1) 이에시마 및 히메지시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이 함께 효율적인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위하여 결정한 조직

2) 영국 빈집 및 추진사례

영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저소득층 및 중산층이 자가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구입 가능한 저렴한주택(affordable housing) 공급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영국은 저렴한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활용가능한 빈집을 리모델링 및 관리를 통해 재활용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 가능한 빈집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영국의 빈집 정비를 위한 정책은 행정지원, 제도지원, 세제지원, 재정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지원으로 2003년 '빈집정비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1권은 정비대상 빈집의 범위, 빈집발생 요인, 관련주체, 2권은 정비절차, 방법, 수단 등이 단계별 사례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적 지원으로는 2003년 「지방정부법」 개정을 통해 빈집에 대해 정의하며, 관리대상으로 간주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강제매수명령(CPO), 강제매매(ESP), 빈집관리명령(EDMOs) 등을 통해 지자체는 소유주에 빈집관리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적절한 조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로 빈집을 매입하거나 매매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세제지원으로는 빈집을 재개발할 시 부가세를 감면해주고, '빈집 프리미엄' 제도를 도입하여 2년 이상 방치된 빈집에 지방세를 최대 300%까지 초과할 수 있는 징벌적 조세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재정지원으로는 빈집 소유주에게 리모델링을 위한 보조금 지원, 빈집 매입을 통한 저렴한주택 공급, 빈집 밀집지역에 빈집정비뿐 아니라 기반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빈집밀집프로그램까지 시기별로 다양하게 지원하였다.

영국 리버풀은 1파운드 주택정책을 도입하여 민간 중심의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0년대 초반 리버풀은 빈집 5천여채를 매입하였고, 4천호를 자체예산으로 철거하였으나 약 1천호의 빈집이 남아있었다. 개보수 예산이 부족한 리버풀은 시 소유 빈집 일부를 인수자가 개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1파운드 주택 정책을 도입하였다. 자격요건은 리버풀 주민 또는 직장(full-time)이 리버풀에 있어야 하며, 생애 첫 주택이어야 했다. 또한 개보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연소득은 2~3만 파운드 이상이고 저축액이 충분한 가구를 선정하였다. 1년 이내 리모델링을 완료해야 하며, 5년 이내 매매가 금지되었다. 2013년 프로그램 도입 결과 22채 모두 인수자에게 최종 양도되었고, 지역에 부동산 사업자의 투자 및 재개발 붐이 이루어졌다.

빈집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안)

[표 1] 빈집정비 제도개선 방안

현행 빈집정비사업 문제	제도개선 방안
빈집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 이원화 • 소유자 정보 파악 어려움 • 빈집대상 모호 	빈집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단 구성 확대 : 이장 · 통장단 • 빈집범위 확대 * 기타 관련사항은 통합가이드라인이 마련됨
철거 및 이행강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성 판단 문제 및 행정쟁송 • 비용산정 및 실행과정의 저항 	철거(행정대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성 판단 가이드라인 • 행정대집행 직권절차 간소화
재산세 중과 등 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소득세 중과 • 재산세 과세항목 변경 	세제 개편(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소득세 및 나대지 재산세 감면 • 빈집 재산세 중과, 빈집세 도입
정비사업 예산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 군 정비사업 재원 부족 	정비사업 예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 지원 • 농어촌 지역 추가 지원
빈집 정비사업 특례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물리적 부분에 대한 특례만 제시 	빈집 정비사업 특례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법인 빈집활용 활성화 지원 • 2지역 거주제 도입
빈집 정보시스템 활용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 빈집정보 비공개 등 활용 제한 	빈집 정보시스템 활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집정보 시스템 로그인 채널 분리를 통한 활용 확대

출처 : 충남연구원, 최정현 외, '빈집 관련 제도 개선 방안 기초연구', 202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빈집정비사업은 단순히 철거, 보수, 용도변경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빈집실태조사, 정비계획수립, 정비사업 추진, 정보시스템 구축까지 전 과정을 포함한다. 시작단계인 빈집실태조사, 사적재산권 문제로 인해 소송과 쟁송의 대상이 되는 철거, 정비사업 예산과 특례사항,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활용미흡 등 빈집정비사업 추진간 반복적으로 발생된 문제를 검토하여 표와 같은 6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문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안 외에도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제시된 세제 개편(안)과 타법령 개정(안)을 동반한 특례보완 사항은 관련기관 및 유관부서와 지속적 협의가 필요하다.

충남형 빈집정비사업 추진방안

충남의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 국외 빈집정책 및 정비사업 추진사례 검토를 통해 충남형 빈집정비사업은 공공지원 정비사업과 민관협력 정비사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 공공지원 정비사업

① 철거지원

실태조사를 통해 3등급으로 확인된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에서 3~5년 기간동안 무상으로 활용한다. 활용 용도는 지역내 공공시설인 마을 주차장, 텃밭, 포켓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 정비사업, 해양수산부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등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현재 추진중인 철거지원 사업은 빈집 철거 후 나대지가 뭍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 중과 등 소유자의 세금 부담으로 인해 사업 참여가 저조하였으나 관련 세법 개정을 통해 철거지원 사업 확대가 가능하다.

[함께 써유]

- (개요) 3등급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 후, 주차장, 쉼터, 텃밭 등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 공용으로 활용
- (사업비) 15,000천원/동 *매칭비율(도3:시군7)
- (사업대상) 도시지역 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제공 동의자



② 안전조치 & 희망집수리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장물 철거, 빈집수리 등을 통해 임시거주시설로 활용한다. 대상은 2등급 빈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과, 안전상 출입을 통제해야 되는 주택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빈집은 수선비용을 지원하고, 안전상 출입 통제가 필요한 빈집은 안전펜스 설치 예산을 지원한다.

③ 철거 후 신축 및 리모델링 등을 통한 공공활용

민선8기 도정과제로 선정된 후 2022년부터 사업을 추진중이다. 원도심 빈집 중 소유자 매매동의를 확보하여 매입이 가능한 빈집을 대상으로 하며, 시·군에서 매입 후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통해 주차장, 포켓공원, 문화공간, 창업공간, 공공SOC 및 마을공동시설 등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시·군 자체 예산 또는 기금을 활용하여 토지 및 건물 매입이 필요하다. 본 사업을 통해 도심 내 빈집으로 인한 주민안전(범죄, 붕괴, 화재 등) 우려를 해소할 수 있으며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여 원도심 내 주거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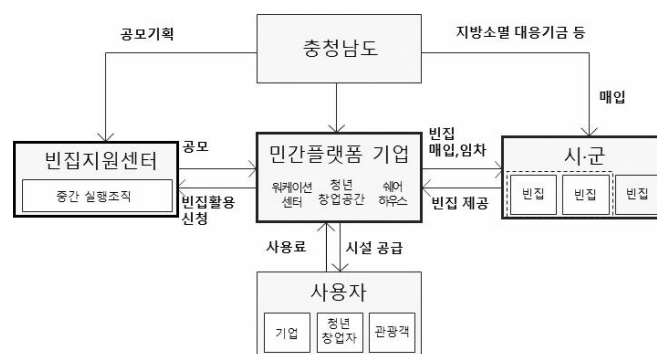
2) 민관 협력 정비사업

① 도심 내 빈집을 활용한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비교적 사업추진 여건이 양호한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에서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과 일반주택 소유자 동의를 받아 총남형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주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공시행사 참여를 통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위해 총남개발공사의 기능확대 및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도(道) 차원에서 관계기관(소규모주택정비사업통합지원센터, HUG)과 협업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② 민간 공모형 정비사업(공유숙박 지원사업)

공공주도 빈집정비는 지속가능성이 낮아 민간과 협업모델이 필요하다. 중간지원조직으로 빈집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센터에서 지자체를 통해 매입가능한 빈집 대상(pool)을 확보한 후, 사업참여 공모를 통해 민간 플랫폼 기업(BTO방식) 선정 후 공유공간 활용사업을 지원한다. 선정된 민간 플랫폼 기업이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사업을 지원하여 모델을 구체화하고, 발굴-운영-지역사회 기여 등 환류 체계를 마련한다.



[그림 5] 민간공모형 정비사업 주체별 역할

출처 : 충남연구원, 최정현 외, '빈집 관련 제도 개선 방안 기초연구', 2023.

③ 빈집 연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지방소멸 우려가 있는 농어촌지역의 빈집 확산으로 범죄, 환경, 위생 등이 지역의 현안문제로 나타남에 따라 제도의 사각지대를 정비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 공공기관, 주민자치조직 등이 CEPTED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지역내 위해(危害)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맺음말

충청남도는 2020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빈집 함께써유’, ‘더 행복한 공유주택’ 등 빈집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시대가 본격화 되며 도시 내 유희건물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빈집정비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가 개선되고, 충남형 빈집정비사업 등이 더욱 구체화 된다면, 빈집을 포함한 유희부동산 대응 정책을 통해 앞서나가는 힘센 충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서울대학교, 2016, Construction Future Issue 아부다비, 마스다르시티
 수원시특례시의회, 2022, 복지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K-BIZ 중소기업중앙회, 2023, UAE 경제사절단 파견 결과보고서
 국회사무처, 2022, 문화·체육·관광분야 의회외교를 위한 UAE 카타르 방문 결과보고서
 헤럴드 경제 보도자료, 2022.11.06., “UAE푸드테크, 농·식품 시장의 오아시스를 찾다”
 충청뉴스 보도자료, 2023. 3. 6., “스마트팜으로 충남 인구문제 해결해야”
<https://smartcity.go.kr/>(국토교통부 Global smart city)
<https://www.dubai-marina.com/>(두바이 마리나 홈페이지)
<https://www.protenders.com/>(ProTenders, Developer-UAE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MasdarCityAD>(마스다르시티 공식 페이스북)
<https://www.timeoutabudhabi.com/>
<https://www.emirates.com/media-centre/>이동훈, 2019, 일본의 빈집은행 운영현황
 고찰,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논문집 66, 101-108
 이재우(2013), 영국의 빈집정비·활용 체계와 수단 고찰
 최정현, 2023, 빈집활용방안 연구를 위한 해외 주요사례 워크숍 발표자료
 최정현·임준홍·제수진, 2023, 빈집 관련 제도개선 방안 기초연구, 『충남연구원 현안과제』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2023,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가이드라인
 영국의회(2015), Empty Housing(England), Briefing Paper No.3012
 GVS(globalvillagespace.com) 홈페이지, <https://www.globalvillagespace.com/>

열린 마당



충청남도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충청남도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이다현 | 네트워크 RE 시민학습센터 운영위원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학생인권실태조사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례로 제정되었다. 2010년 10월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광역시 교육청, 2012년 서울특별시 교육청, 2013년에는 전라북도 교육청, 2020년 충청남도교육청,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각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두발·복장의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검사 제한 등 사생활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집회 및 표현의 자유, 자치활동의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및 (학생)인권옹호관·학생인권교육센터 등을 포함하며 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 인권교육을 위한 절차를 정하여 학교 교육과정 및 학교생활에서 학생 인권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를 통해 구체화된 지방분권 및 교육자치제도 아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청과 학교의 책무는 이를 근거로 학생인권 담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017년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조례를 근거로 각 학교에 '여학생이 생리공결제도를 사용할 권리존중, 여학생의 바지교복 선택권 보장, 성차별적 용의 복장 제한 규정 개선, 교사의 성차별적 언어 표현 방지, 성별을 고려한 학교시설 조성, 성 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불합리한 분리 지양'을 권고한 것이 대표적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구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한 기반이 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를 기반으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매년 학생인권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인권실태조사는 학생인권에 대한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 학생인권 현황과 변화양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 글에서는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실시되는 학생인권실태조사에 대해 확인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실태조사

충청남도교육청은 2020년 6월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로,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보호받는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 외에도 학생인권 보장 원칙, 학생인권의 보장기구와 구제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학생인권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조례 제정 이후 도 교육청은 2021년부터 매해 학생인권조례에 기초한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학생, 보호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설문 표본은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학교 4, 5, 6학년과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의 1개 학급 학생과 학부모, 전체 교원으로 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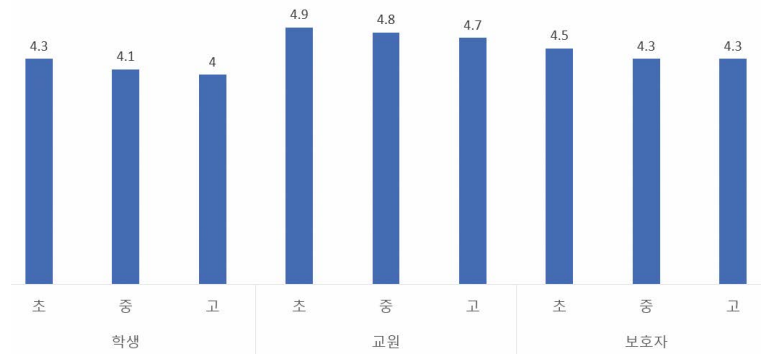
[표 1] 설문 대상별 응답 수

사업방향	초등	중등	고등	계
학생	4,254	1,952	1,239	7,445
보호자	1,059	484	377	1,920
교원	973	772	702	2,447

조사문항은 인권에 대한 총괄적 인식에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를 구성하는 기본 영역(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 인권교육), 그리고 노동인권교육을 더해 만들어졌다. 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원의 설문 모두 각 대상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르게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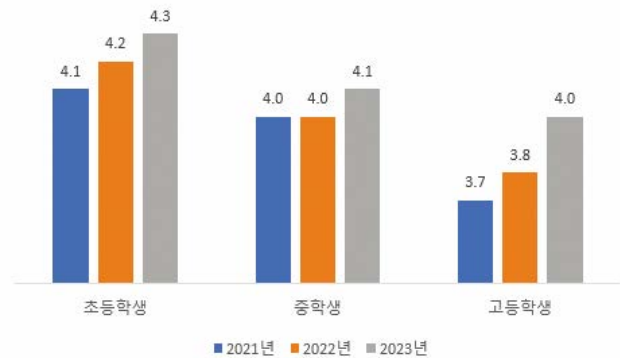
실태조사 주요 결과

학교에서 보장받는 학생 인권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정도(5점 만점)를 조사한 결과, 대상별 평균값을 비교하였을 때 교원, 보호자, 학생 순으로 인식 수준이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학교급에 따라서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생 인권 보장에 대한 인식 평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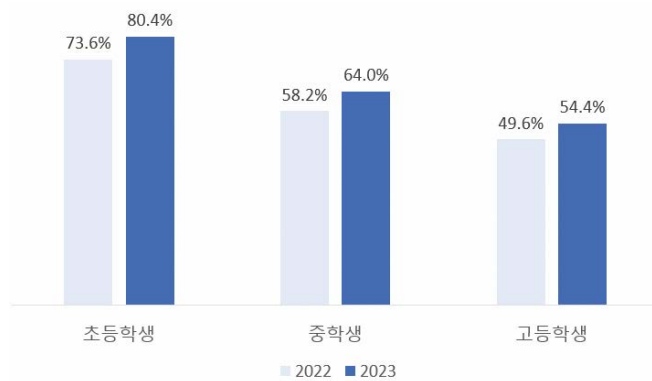


[그림 1] 대상별 학교의 학생인권 보장 정도에 대한 인식

이러한 결과는 조사가 진행되는 매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3년 연속 학생 인권 보호에 대한 학생의 주관적 인식은 초등, 중등, 고등 수준으로 높게 조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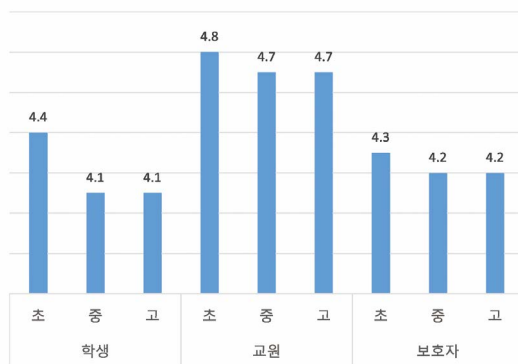


[그림 2] 2022-2023 학교급에 따른 인권보장 정도에 대한 학생 인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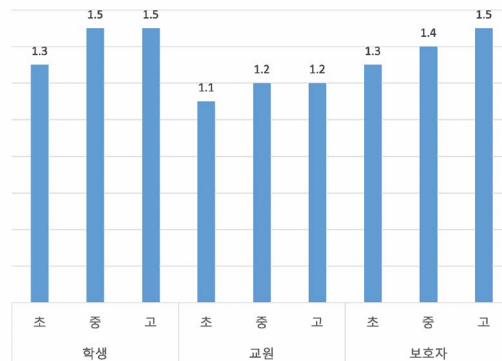


[그림 3] 충청남도학생인권 조례의 학생인권 보장 도움 정도에 대한 학생인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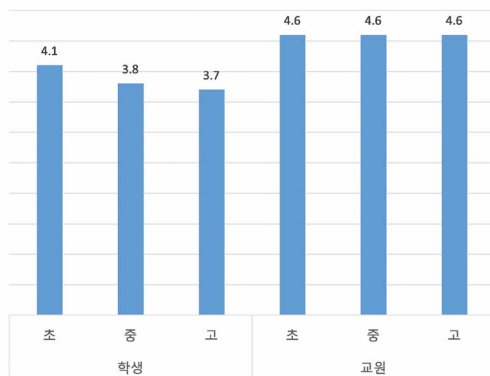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물음에서도 초등학생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 결과로 차이의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차원에서 추측해보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 생활 규칙이 엄격해지는 것, 학생의 인권의식이 더 분명한짐에 따라 학생인권보장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는 것, 입시 문제로 인한 자율성 침해 등이 원인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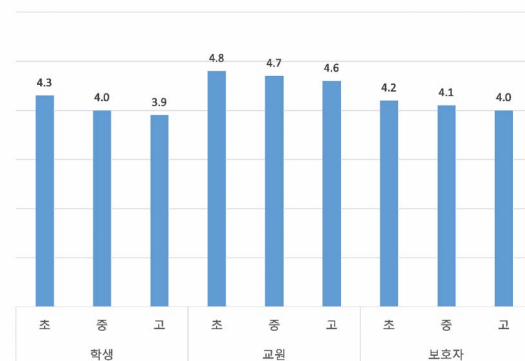
[그림 4] 자유권에 대한 인식



[그림 5] 평등권에 대한 인식



[그림 6] 참여권에 대한 인식



[그림 7] 교육복지권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및 향후 과제

조사 결과는 해마다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학생인권조례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과 학생인권보호 노력이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이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학생인권보장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을 말한다. 실태조사는 3년 동안 매해 진행되었으나 조사가 시작된 2021년은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일상적 학교 생활 조건이라 보기 어려울 것이다. 올해 설문조사가 진행된 직후 발생한 서이초 사건과 대전 교사 사망 사건 등 일련의 사태가 학생인권과 교권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처방에 대한 논의는 학생인권보장 차원의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조사 결과 여러 문항에 걸쳐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교사 간 학생 인권 사안에 대한 인식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표적으로 자치활동에 있어서 자치활동 보장 정도에 대한 학생의 인식과 교사의 인식은 꽤 큰 차이가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차이를 어떻게 좁히는 가에 있다. 양적인 교육 횟수나 캠페인의 증가 뿐 아니라 각 주체가 대화나 협의를 통해 관점을 공유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인권 전반에 대한 인식 결과에 비교하여 자유권과 참여권에 대한 인식은 다소 낮은 것도 중요한 지점이다. ‘모두를 위한 인권’, ‘인권보장에 대한 공감’ 등 선언적 인권 의식은 높은 편이나 실제 학교 생활에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자유권과 참여권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기본적 권리에 해당한다. 이에 학생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안을 개선하는 노력과 참여를 통해 학교 규칙을 정하는 학생의 참여가 폭 넓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을 통한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관점에서도 학생들의 자유권과 참여권 보장은 매우 중요하다.

설문조사에 더해 진행된 인터뷰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모두 학생인권의 중요성과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학교현장에서 인권이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학교생활규칙의 제정, 학생인권교육, 인권침해상황 대응 등 다양한 인권 보장 활동이 학교의 정규 활동으로 인정받고 그 과정에서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고 결정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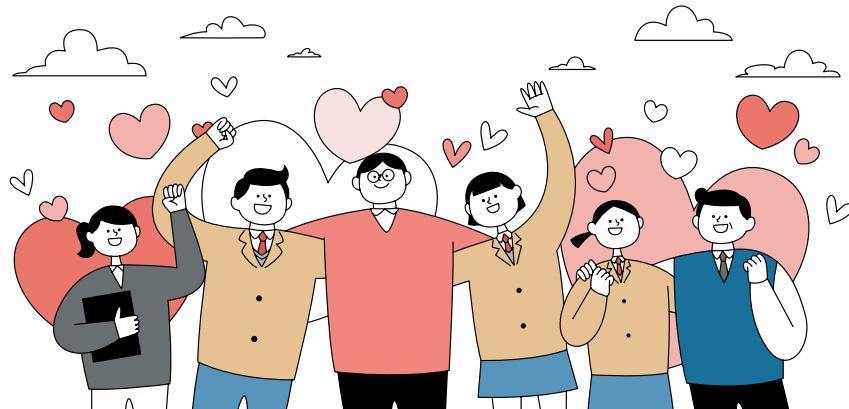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사와 학생의 인권은 상생 관계, 학교 구성원 모두의 존엄성을 지키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이 그간 학생인권을 강조함으로써 생겨난 문제라거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탓으로 돌리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경계해야 할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원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도 궁극적으로는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관점에서 학교 구성원이 안전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대책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인권을 강조하거나 부정하여 쟁점을 만들기보다는 이러한 노력이 인권 친화적 학교로 향하는데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지침서에서는 유니세프의 아동친화학교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의 열쇠말 10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표 2]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의 열쇠말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의 열쇠말

- ①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서의 학생
- ② 참여와 결정을 훈련할 수 있는 학교
- ③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는 학교
- ④ 감당할 만한 교육
- ⑤ 자유의 행사를 통한 책임있는 삶의 영위
- ⑥ 총체적 삶에 대한 돌봄이 있는 학교
- ⑦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에 있는 학교
- ⑧ 네트워크와 연대가 꽃피는 학교
- ⑨ 교사의 권한과 역량 강화
- ⑩ 권리구제에 대한 보장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2007).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
충청남도교육청(2023). 충청남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연구.

언론이 바라본 충남



내 고향의 인구소멸을 생각한다

내 고향의 인구소멸을 생각한다

김재근 | 대전일보 선임기자

충남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고향에 갈 때마다 안타까움과 연민의 감정이 솟아오른다. 새로 지은 집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이 오래되고 낡은 집들이다. 동네 사람들도 나이가 70세가 넘어서 어른신네 뿐이다. 이분들마저 세상을 떠나면 온 동네에 빈집만 덩그러니 남게 될 것이다.

인구소멸은 나라의 명운이 걸린 국가적 과제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압도적 최저 수준이다. 올해는 0.68명으로 0.7명 대마저 깨질 것으로 예상된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올해 5,175만 명에서 2030년 5,131만명, 2072년에는 3,622만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세종과 경기, 제주 3개 시·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2050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공주, 금산, 논산, 보령, 부여, 서천, 예산, 청양, 태안 등 9곳이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됐다. 2045년에는 천안을 제외한 충남의 모든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 교육, 군사, 사회, 문화, 의료 등 모든 분야에 위기를 몰고 왔다.

제조업과 농업, 건설업 현장에 인력이 없어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지고 있다. 어린이와 청년층이 줄어드니 소비가 위축돼 자영업자들이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특히 군 단위 지역은 뭇 해도 장사가 안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교육현장도 심각하다. 충남도내 422개 초등학교 중에서 올해 신입생이 1명도 없는 학교가 17개교나 된다. 천안과 아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면단위 지역의 초중고교가 거의 사라졌다.

정부도 저출산과 인구감소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보고 올해 예산 17조 6,000억원을 편성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을 살리기 위해 매년 1조원의 인구소멸대응기금도 지원한다.

충남도와 15개 시·군도 각각 인구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과 육아 병행, 출산휴가 급여 확대, 보육 인프라 확충 등 직접적인 지원대책은 물론 주거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중장기 정책도 내놓고 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 사람들에게 인구소멸은 먼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지방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이미 경제도 교육도 무너졌고, 인구가 더 줄어들면 지방자치 단체의 지위마저 박탈당할지도 모른다.

정부와 정치권이 인구감소를 절박한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에 나섰다지만 많이 늦었다. 요즘 청년들은 대한민국을 '헬 조선'이라고 부른다. 마땅한 일자리도 없을뿐더러 주거난, 사교육비 등이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이나 대도시가 아닌 지방의 환경은 더욱 열악하다.

내 고향 금산은 인삼과 약초, 갯잎 농사로 이름난 곳이다. 지금 이대로 방치하면 인구가 줄고 산업기반이 무너져 중국산 인삼과 갯잎이 시장을 장악할지도 모른다.

지방이나 고향에서 살려는 젊은이도 꽤 있다. 산업단지를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외지 인구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당장 이들이 제대로 정착하여 아이를 낳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아니겠는가?



로컬이
답이다



공주 제민천의 중심에 (주)퍼즐랩이 있다

권오상 | (주)퍼즐랩 대표



[그림 1] (주)퍼즐랩의 권오상 대표

세상이 그렇다. 중심과 주변. 그리고 그 속에서 일상을 보내는 사람... 그렇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은 중심일까? 주변일까? 이제 더 이상 수도권과 지방의 이분법적 공간 분리로 설명하지 말았으면 싶다.

지방소멸과 저출생·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에 희망의 바람이 불고 있다. 바로 지역에 발을 붙이고 그곳의 자원과 힘을 합쳐 상생하는 일명 ‘로컬기업’이 그 주인공이다. 앞으로 충남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로컬기업(앵커, 크리에이터, 창업 등)을 직접 찾아가 사람 이야기, 회사 이야기, 그리고 지역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유하고자 한다. 온전히 사람과 삶이 존중받는 그런 모습을 꿈꿔보며...

<편집자 주>

**“청년이 적고, 인구가 적어서 여기는 안 될거야 하는
지역이 오히려 기회가 많습니다”**

Q1 (주)퍼즐랩(Puzzle Lab)이라는 사명이 평범하지 않고 특이하여 기억에 남는데, 그 뜻과 그렇게 지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주)퍼즐랩의 사명은 퍼즐(puzzle) + 랩(lab)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퍼즐랩이라는 회사는 비유하자면 제민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을 구성하는 하나의 큰 퍼즐로써, 그 퍼즐을 이루는 각각의 조각(다양한 가게, 서비스, 문화자원)들이 특정한 기능과 역할을 잘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조각은 전체가 될 수 없고, 계속해서 다른 퍼즐 조각들을 찾아 연결해야만 전체가 되어 유의미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소퍼즐을 맞출 때 구석에 있는 조각을 먼저 찾는다면 전체 퍼즐을 맞추기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으니, (주)퍼즐랩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랩은 말 그대로 실험실입니다. 퍼즐랩은 어제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며, 솔루션을 찾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이것저것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확히 보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제까지는 가설이고 도전이었지만, 결과값이 나온 후에는 그것을 디폴트로 두고 다른 실험과 도전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Q2

경기관광공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시며 관광업계(MICE)의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오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경기도에서 먼 충청남도 공주에 정착해 (주)퍼즐랩을 설립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주)퍼즐랩을 창업하게 된 것에는 특별한 계기가 있을 것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안정적인 공기업을 퇴사하고 인구감소 지역인 공주시에서 창업하게 된 계기는 다소 즉흥적이었습니다. (주)퍼즐랩에서 운영하는 봉황재 한옥 게스트하우스인 옛집을 우연히 발견하였고, 그날 바로 계약금을 걸고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이런 방식으로 창업하는 것을 다른 분들께도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돌이켜보면 저는 대체로 일을 일단 시작하고 나서 주변 자원을 관찰하면서 필요한 조각을 찾아내고 맞춰 나가는 방식으로 비즈니스모델과 스토리를 구성해 온 것 같습니다.



[그림 2] (주)퍼즐랩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봉황재

Q3

(주)퍼즐랩이 궁금해서 검색을 좀 해보았다. 제민천(마을)을 중심으로 한옥 고택 게스트하우스 ‘봉황재’, 공주 청년마을살이 프로그램 운영, 마을투어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 꼭 일본의 소도시 마을을 보는 느낌 이랄까? (주)퍼즐랩이 하는 주요 사업 등을 소개해달라.

(주)퍼즐랩의 주요 사업은 여행업과 숙박업, 리테일, 커뮤니티 운영과 교육사업 등이 있습니다. 먼저 여행업과 숙박업은 마을 단위의 인바운드 여행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을 내의 공간과 사람을 연결하고 역사성과 스토리텔링을 부가하여 마을을 브랜드로 만드는 목적지 마케팅 (Destination Marketing)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행객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없다면 저희가 직접 공간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민천의 마을안내소, 코워킹오피스, 대관이 가능한 회의실과 교육장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을 내에 2개의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내에서 장기체류가 가능하도록 세어하우스와 한 달 살기 하우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여 워크케이션, 체류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직접 기획·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리테일은 식음료 업장과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인과 전통주를 파는 보틀숍, 지역이주와 제민천 마을에 대한 관심사에 기반한 작은 책방에서는 마을 굿즈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밤을 주제로 하는 베이커리 카페도 오픈하였습니다. ‘체스넛프렌즈’라는 이름인데요, 한옥 베이커리 카페의 한계를 넘어서 공주 출신 밤과 친구들의 스토리를 담은 친근한 브랜드로 전개하려고 합니다. 공주의 대표적인 맛집인 곰골식당 바로 맞은 편에 있으니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림 3] (주)퍼즐랩이 운영하는 카페이자 마을투어 라운지공간인 체스넛프렌즈

Q4 요즘, 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및 환류효과 (주변지역 경제효과, 매출, 시설확충 등)에 관심이 많다. (주)퍼즐랩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으로 인해 고용창출 및 환류효과가 얼마나 있었을지?

현재 직원은 6명이고, 2~3명 정도 더 총원계획이 있으며 '24년 1인당 매출을 1억 5천에서 3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민천에 우연히 방문하였다가 이곳의 라이프스타일을 즐기거나 계속 머무르고 싶어서 (주)퍼즐랩에서 입사하거나 가게를 오픈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상권이라는 게 다양한 업종과 이벤트로 체류시간을 늘리고 여행자의 시각에서 계속해서 방문하고 싶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찾아와야 하는지, 주차는 어디에 해야하는지, 어느 동선으로 여행을 하면 좋을지 안내받을 수 있는 마을안내소 및 공유오피스, 가이드 등을 (주)퍼즐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자의 시각으로 고민하여 여행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다양한 서비스 및 업종을 채워 체류시간이 늘어나고 재방문이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동네가 활성화되고 인구 유입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의 장점은 제민천을 끼고 자연발생적으로 스트리트몰 형성이 되어있어 방문객에게 흥미로운 이벤트 제공 및 동선이 가능합니다. 제민천 사이로 식음료가게, 동네책방 10개, 갤러리 6개, 공방 3~40개가 있고 특색있게 구옥(한옥)을 리모델링한 카페 및 식당도 늘어나고 있으며, 게스트하우스 및 워크ेशन 공간, 세어하우스 등이 있어 많은 인원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 4] (주)퍼즐랩 대표 및 직원

Q5

많은 사업을 운영하고 새로운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지만 어려운 점도 많을 것 같다.

특pecially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웃음) 다만 저희가 일을 만들고 결과를 내는 과정이 제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변화의 속도보다 다소 더딘 것이 아쉽긴 하지만, 훌륭한 인재들을 채용하여 각자 자신의 욕구와 관심사를 발견하고 스스로 프로젝트의 주인이 되어 결과를 만들어 내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주)퍼플랩 직원들과 추진한 사업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며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Q6

다양한 신규사업을 런칭 후 홍보와 직원을 뽑고 교육하는 것이 힘들 것 같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불경기가 길어지면서 더욱... 충청남도의 많은 소상공인 및 기업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극복한 노하우가 있을까?

(주)퍼플랩은 회사라기보다는 학습조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호학습과 성장조직이며, 직원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신규사업을 위한 모든 일은 실험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퍼플랩에는 브랜드이미지 및 대외적인 신뢰, 업무 노하우, 커뮤니케이션 방식 등 누적된 사회적 무형자산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주)퍼플랩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회사와 직원 간에 서로 상호학습하며 좀 더 수월하게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여 빠르게 안정화합니다. 이러한 업무 경험을 쌓아 직원 개인의 역량향상과 회사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제민천에서 이 사업은 안 될거야. 예를 들어 100명의 관광객은 수용할 수 없을거야 하는 것을 직원과 함께 상호학습하고 성장해나가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퍼플랩은 인위적인 역량강화 및 홍보, 개발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접근방식이 여행자의 시선, 즉 외부인의 시선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원주민들이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관찰하고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데, 간단히 말해서 리빙랩(living lab)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모든 구성원 전체가 각자의 방식으로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각자의 방식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할 수 있게 약간의 개입, 트리거(trigger)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Q7 앞으로 ㈜퍼즐랩의 계획 또는 개발 예정인 신규사업이 있다면?

아직, 새로운 신규사업 런칭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는 신규사업을 시작할 때 긴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때그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면 바로 준비해서 실행하곤 합니다. 새로 오픈한 카페 체스트넛프렌즈도 10월에 아이디어가 나왔고 2개월 동안 준비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퍼즐랩의 사업은 우연한 기회와 아이디어로 시작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도 ㈜퍼즐랩은 그때 상황에 맞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기획하고 빠르게 준비하여 시작할 생각입니다.

Q8 충청남도의 기업인으로써 도와 공주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마을 단위나 로컬에서의 지역 활성화 우수 사례들을 사례집 출판이나 여러 채널을 이용하여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새로운 정책발굴이나 사업을 기획하고자 할 때 해외의 좋은 사례를 보러 방문하는 것처럼, 개발도상국 등 다양한 해외국가들이 지역 활성화와 관련하여 한국의 좋은 사례를 보러 많이 방문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의 좋은 사례를 수출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9 제2의 ㈜퍼즐랩을 꿈꾸는 충남의 청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년이 적고, 인구가 적어서 여기는 안 될거야 하는 지역이 오히려 기회가 많습니다. ㈜퍼즐랩 또한 처음 공주에 와서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그건 서울이니까 천안이니까 되는거죠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왜 다른 지역에서는 ㈜퍼즐랩이 하고 있는 사업을 하지 않느냐 라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지역 안에서 성공한 사례를 만들어 내면 이러한 분위기 바뀔은 생각보다 금방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고 들여보지 않기에 오히려 해낼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도전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원 소식



충남연구원, 힘써 충남 위한 정책연구 강화

충남연구원-선문대-한서대, 충남 스마트 클린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 체결

중부권 대기질 개선 방안 머리 맞대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 내포 이전 개소식 가져

연구원 소식 01 ▶▶▶

충남연구원, 힘센 충남 위한 정책연구 강화

- 24년도 도정 선도 연구 공감 확산... 연구자문위원회 개최

충남연구원(원장 유동훈)은 민선 8기 충남도정을 선도하기 위한 융복합 정책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8개 분야 '전략팀'을 꾸렸다.

충남도 5대 목표 20대 전략 중 미래전략산업육성, 국가탄소중립경제 선도, 지역특색을 살린 균형발전, 농어업의 스마트 미래성장 산업화 등과 연계한 특화연구를 추진한다는 의미다.

충남연구원은 지난 12월 27일 연구원에서 연구자문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역의 미래 핵심정책의 선제적 연구를 위해 부서가 아닌 아젠더 중심의 비상설 연구조직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2024년부터 본격 운성되는 전략팀은 △도정대응 △미래산업 △신규균형발전 △인구감소대응 △농정혁신 △초광역 △탄소중립 △정책비전 등 총 8개 아젠더(안)를 중심으로 충남도 및 시군, 도의회, 분야별 전문가 등과 함께 개방형 참여형 공동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유동훈 원장은 “올해는 탄소중립, 베이벨리, 스마트팜, 균형발전, 인구소멸 등 충남도정의 핵심 정책변화를 선도하는 연구성과를 이끌어낸 반면, 과학기술진흥본부 통합과 충남RISE센터 신설 등에 따른 보다 다양한 연구역량을 확산시켜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며 “충남도 국비 10조 원 시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미래선도연구를 수행함은 물론, 충남도의회-연구원 간 지역정책세미나를 공동 추진하는 등 정책수요자와의 공감대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연구원은 2023년도에 전략과제 32건, 도정책과제 12건, 현안과제 90건, 수탁과제 62건, 시군협력과제 15건 등 총 211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고, 연구 활용도 제고 및 확산을 위한 인포그래픽, 정책지도, 정책현장, 충남리포트플러스, 유튜브영상 등 60여건 이상을 제작해 서비스했다.



연구원 소식 02 ▷▶▷

충남연구원 - 선문대- 한서대, 충남 스마트 클린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 체결

- 지역 기후 위기 극복, 환경오염 해결 위한 공동 연구·협력 모색

충남연구원(원장 유동훈)은 선문대학교(총장 문성제), 한서대학교(함기선 총장)와 일명 '충남 스마트 클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12월 28일 연구원에서 체결했다.

본 프로젝트는 충남 해양·환경·생물 생태지도 구축 등 지역의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향후 친환경 환경정화 산업 및 시장 확대에 따른 고용 창출,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활성화는 물론 환경·대기오염 해결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이번 협약은 △연구 협력을 통한 교육·연구개발·기술 지원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운영 협력 △공동 세미나 개최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 △지역 내 현안사항 및 시책 등에 관한 자문 및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추진중인 충남도의 환경오염 정화 등 실증적인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다자간 상호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분야 학술·연구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발전에도 공헌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충남연구원 유동훈 원장, 선문대학교 문성제 총장, 한서대학교 함기선 총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 등 약 15명이 참석했다



연구원 소식 03 ▷▷▶

중부권 대기질 개선 방안 머리 맞대

충남연구원(원장 유동훈)은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명형남)와 공동으로 1월 9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중부권 대기질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중부권(대전·충남·세종·충북·전북)의 대기질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각 기관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공동 연구방안 마련을 통해 지역민에게 깨끗한 공기질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충남연구원 김종범 책임연구원은 발표에서 “중부권은 금강유역환경청의 관리와 해당 지자체의 노력으로 PM2.5의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공기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는 중부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과 연구환경 관리 방안에 대해, 충남대학교 임세희 교수팀은 공·편익을 위한 도심 에어로졸 연구와 대기질·기후·건강 간의 상관성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환경부가 제정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이 대기질 개선 시행계획을, 충남연구원은 대기질 모니터링과 개선기술 적용 및 정책개발연구를,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는 충남지역 배출사업장 환경컨설팅 및 현안 연구와 교육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금강유역환경청은 대기오염배출 통합사업장의 오염도 검사를 위해 '22년 대기시험분석실을 증축하고 '23년 '대기분야 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받는 성과를 올렸고, 앞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기오염물질 분석을 통해 중부권역 통합사업장도 관리할 예정이다.



연구원 소식 04 ▷▶▷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 내포 이전 개소식 가져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가 내포로 이전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충남전문건설회관(예산군 소재)으로 자리를 옮긴 과학기술진흥본부(이하 과기본부)는 2월 27일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충남도 전형식 정무부지사, 충남도의회 이종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충남도 유재룡 산업경제실장, 충남연구원 백주현 과학기술진흥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과기본부는 지난 5월 기존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충남연구원으로 통합되면서 본부 체제로 재편되었다. 과기본부는 충남 과학기술 발전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도내 산업경제 고도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선도하게 될 예정이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충남 지역 정책연구와 과학기술의 융합으로 도정 싱크탱크 기능이 더욱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종화 위원은 “충남의 미래 신성장을 견인할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연구 역량을 한데 모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백주현 과기본부장은 “본부의 내포이전을 계기로 충남도를 비롯한 15개 시군의 과학기술정책을 보다 적시에 대응하고, 국가 R&D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 등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충남연구원 본원은 공주시시에, 내포에는 과기본부, 공공디자인센터,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전문건설회관에, 그리고 독립청사인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물환경연구센터) 등 세 곳에서 통합·운영하게 된다.



연구원 발간물 ▶▶▶

충남
리포트
플러스



태어나야 고향인가 정들면 고향이지!
- 충남 농촌지역 살리는 '관계인구' 정책 마련해야
유학열 선임연구위원, 조소진 연구원



제대로 된 청년농부 키우기! 충남 스마트팜 정책 설계
강대아 연구위원, 이도경 연구원

인포
그래픽



온라인거래 활성화가 충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강수현 연구원, 신동호 선임연구위원



충남 AI·메타버스 기반
도로·생활 안전관리체계
최창규 선임연구위원 · 오정민 전문연구위원 ·
윤성준 전문연구위원

정책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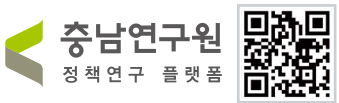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비 위축과
관광객 유치의 상쇄 효과
한석호 초빙책임연구위원 · 김보람 연구원



충청남도 공공상수도 취락지역 분석 및 과제
김영일 선임연구위원



QR코드를 스캔하면 YouTube채널로 연결됩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CNI 정책연구 플랫폼 채널로 연결됩니다.

열린충남

THE CHUNGNAM INSTITUTE

충남연구원은 도민의 더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역사와 전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앞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풍요롭고 건강한 정신으로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충남도민의 모습입니다.

희망찬 충남의 미래를
충남연구원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우) 32589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 (금흥동)
TEL 041-840-1114 FAX 041-840-1129 <http://www.cni.re.kr>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작은 실천”
본 인쇄물은 재활용 가능한 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